

‘12·29 여객기참사’ 기체 잔해물 재조사… 10회 이상 실시

1년 넘게 방치됐던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물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됐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사조위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기의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참사 이후 1년 넘게 무안공항 환경에 방치돼 있던 사고기 잔해물의 보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조사에는 과학수사대 25명과 사조위 조사관 5명 등이 투입됐다. 참사 유가족 30여명도 현장 조사를 참관했다.

사조위는 그동안 노면에 있던 기체 잔해물을 컨테이너 4개 동으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유류품과 시편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주요 단서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 부피가 큰 기체 꼬리날개의 경우 컨테이너로 옮긴 뒤 현장에 별도의 가건물을 증축해 보관할 예정이다.

과학수사대는 10여 명씩 3개 조로 나눠 잔해물 조사를 하고, 기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차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직후부터 요구했던 잔해물 조사가 이제야 시작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주요 부품 등 사고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일산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12일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1년 넘게 방치돼 있던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기 일부 잔해물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사조위·과학수사대 합동 조사…10회 이상 진행 예정

“체계적 보관 절차 마련, 유류품 확인시 유족에 전달”

사조위·과학수사대 합동 조사는 “잔해물 보관 개선공사를 거쳐 체계적으로 보관하겠다. 이 과정에서 유류품이 발견되면 소유주를 확인한 뒤 유족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다만 잔

해물의 양이 많아 최소 10회 이상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잔해물은 사고 조사 완료 시까지 보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참사 사고기 잔해물에 대한 재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사조위가 유가족의 사진 촬영을 불허하면서 마찰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유가족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요구했지만 사조위는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금지했고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교통대책상황실(062-613-4991)을 운영해 연휴 기간 교통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시립묘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광주송정역·광천터미널·영락공원 등 주요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지도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시립묘지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조정한다.

광주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특별교통대책상황실 가동… 혼잡지역 교통지도 강화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영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설날 당일(17일) 30회 증차 운행하고, 월남동-태평을 운행하는 지원15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

주요 혼잡지역의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종합버스터미널, 망월, 영락공원 등 주요 교통 거점에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 회원을 배치해 교통 정리와 주·정차 지도할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통신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신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통신장 주차장과 280여개 공공기관·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 전통신장은 ▲동구(대인·산수·남광주) ▲서구(양동·서부) ▲남구(무등·봉선·백운대성) ▲북구(말바우·두암·운암·동부·서방) ▲광산구(1913송정역(송정매일 포함)·송정5일·우산매일) 등 총 16곳이다. /전민규 기자

전남도는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에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지역 유입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19·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과 도축장 등 방역 취약시설 집중 소

전남도, 설 명절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방역대책 추진

독을 진행한다. 소규모 농가에는 농협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임차 소독지원 54대를 동원, 현장 소독을 지원한다.

주요 방송사 자막방송과 마을 방송·문

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 의심 신고 때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출입 통제와 매일 소독,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전두환 회고록’ 8년 7개월만 “역사외곡”

전씨 측, 위자료 합계 7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허위사실 삭제 없이는 회고록 출판금지” 명령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펴 낸 회고록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다고 봤다.

전씨 측의 상고 제기 약 3년 4개월, 오월단체의 첫 소송 제기 약 8년 7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상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앞서 2심이 진행되던 2021년 11월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전씨의 소송 자격을 이어 받은 부인 이순자씨와 장남 전씨가 오월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위자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단체별로 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2심에서 선고된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초판 및 2판의 출판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전씨 측은 앞으로 2심에서 지적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서술한 일부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는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법원 판결과 과거사 진상 노력의 결과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표현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회고록이 오월단체들의 명칭을 직

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과 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여러 차례 지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조비오 신부를 향한 표현도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했다”고 판시했다.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 측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고 회고록 출판 금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너)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의 내용이 공의를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즉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장남 전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며 “증거들만으로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의 회고록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된 직후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그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출판금지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전씨 측은 2017년 8월 1심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이후인 같은 해 10월 회고록 1권 초판 일부 내용을 검은색으로 칠해 가린 1권 2판을 출간해 배포했다.

오월단체들은 회고록 2판에 담겨 있는 추가 허위 사실 40여건을 찾아내 2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을 냈고, 1·2차 소송이 병합돼 심리가 이어져 왔다.

전씨 측은 2차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2018년 5월 이후 회고록을 다시 출간하지 않았다.

한편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전씨의 형사 재판은 그가 사망하며 2022년 1월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